

2026년 1월 17일 시행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인문사회계열 : 필수과목】

제 1 과 목	제 2 과 목
헌 법	행 정 법

응시자 안내사항

☞ ‘시험 감독관 또는 방송’의 안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에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의 ‘과목 순서’, ‘페이지 수량’, ‘인쇄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 본 시험지는 총 24페이지입니다.
3. 모든 문제의 정답은 ‘1개’ 입니다.
4. 시험 감독관에게 문제의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시험지는 시험이 끝난 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 헌 법 】

1.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당해 선거일후’는 수범자가 예측가능성을 지니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법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 중 ‘기타 관계’ 부분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그 밖의 관계’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작용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④ 「형법」 제123조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 중 ‘사람’에 ‘공무원’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중 ‘공익’ 부분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보기>의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국가의 과제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ㄴ.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 ㄷ. 문화예술진흥의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이라는 특별부담금의 형태로 공연관람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ㄹ.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한 것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 ㅁ.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를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질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3. <보기>의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ㄴ. 행정각부의 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이나 당연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 ㄷ. 입법자가 동장(洞長)의 공직상의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범주에 넣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 공무원이 국가 등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4. <보기>에서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 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ㄷ.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ㄹ. 다른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ㅁ. 「공직선거법」상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ㄱ, ㄴ, ㄷ, ㅁ

5. <보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기〉-

- 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① \neg , \perp
② \perp , \Box
③ \sqsubset , \sqsupset
④ \neg , \sqsubset , \sqsupset
⑤ \perp , \sqsubset , \Box

6. 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국민연금법」에서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1. 가구구성 관련 기준, [2]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난민 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단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③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조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구치소장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 ③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그의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해당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와 형사피고인만을 언급한 취지는, 우리 헌법이 그 입헌 당시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항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조항은 건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로 하여금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정사법」 조항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인 ‘가구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구 구분, 거주기간 등과 같은 ‘가구에 관한 사항’, 거처의 종류, 총 방수 등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항’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들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 ③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 ④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하고 이를 통하여 전 배우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⑤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의 의미는 그 규율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1. <보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기〉-

- 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 ㄴ.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은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ㄷ. 과도한 비방으로 인해 혼탁한 선거과정이 더욱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 ㅁ.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neg(x), \sqcup(\bigcirc), \sqsubset(\bigcirc), \sqsupset(\bigcirc), \sqcap(\bigcirc)$
- ② $\neg(\bigcirc), \sqcup(x), \sqsubset(x), \sqsupset(x), \sqcap(x)$
- ③ $\neg(x), \sqcup(x), \sqsubset(\bigcirc), \sqsupset(\bigcirc), \sqcap(\bigcirc)$
- ④ $\neg(\bigcirc), \sqcup(\bigcirc), \sqsubset(x), \sqsupset(x), \sqcap(x)$
- ⑤ $\neg(x), \sqcup(x), \sqsubset(x), \sqsupset(\bigcirc), \sqcap(\bigcirc)$

12. <보기>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기〉-

- ㉡.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 집회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더라도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 여부만이 문제된다.
- ㉤.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의 경우에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해당 집회를 신고 하였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 ① \neg , \vdash
② \neg , \perp , \vdash
③ \perp , \exists , \square
④ \vdash , \exists , \square
⑤ \neg , \perp , \exists , \square

13. <보기>에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입법자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행위제한조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요건까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대한 건축행위의 제한이나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일시적인 출입금지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제한이다.
- ㄷ.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지급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수당제한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근수당의 전부가 아니라 징계의 종류에 따라 감액비율을 달리하여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당제한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 ㄹ.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을 경과하였더라도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조항은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ㅁ.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연속적인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확정된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으므로 기간제교원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보다 낮은 호봉을 받게 되었다 하여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ㄱ, ㄷ ② ㄴ, ㄹ
- ③ ㄴ, ㅁ ④ ㄴ,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14. <보기>에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ㄴ.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ㄹ.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ㅁ.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15. <보기>에서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이다.
- ㄴ. 교원노조의 조합원의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교원이 아닌 사람을 그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ㄷ.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 ㄹ. 1972년 유신헌법에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유보의 대상으로 방위산업체가 처음 신설되었다.
- ㅁ.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① ㄴ, ㅁ
- ② ㄱ, ㄴ, ㄷ
- ③ ㄱ, ㄹ, ㅁ
- ④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16. 가족생활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입양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입양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양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라도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독신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법제도 형성 이전의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과는 달리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 ④ 성명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하고, 성명의 특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
- 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가해자가 인척인 경우까지 면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해당 피해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

17.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국회의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으로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법률로 확정한다.
- ④ 국회의원을 징계·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8. <보기>의 대통령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ㄴ.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 않았다면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 ㄷ.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하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다.
- ㄹ.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ㅁ.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19. <보기>에서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 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
- ㄷ.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ㄹ.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므로 감사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ㅁ.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20.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② 범죄행위 후에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시의 법률인 구법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③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법원에 의해 위헌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21.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④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피청구인의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 ⑤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22.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권
- ㄴ.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
- ㄷ.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 ㄹ. 교수의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
- ㅁ.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23.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방위사업청장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것
- 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 ㄷ. 기획재정부장관이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공표한 행위
- ㄹ.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 ㅁ. A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 중인 남성들은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조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동물보호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간접흡연자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간접흡연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판매점 등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나, 지원금의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용자들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5. <보기>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취지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ㄴ.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포함된다.
- ㄷ.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ㅁ.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 행정 법 】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 ② 사인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상급심 재판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 ④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기본법의 특성상 선언적 효력만 가질 뿐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쟁송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 ②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수인의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② 「군인사법」상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임명한 행위는 통상의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보기>에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구청장에게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乙구청장은 “甲의 사업계획은 ‘관할 구역에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많아 신규 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설폐기물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당초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의 사업계획은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 주거지역, 교육시설에의 악영향’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보 기>—

- ㄱ.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甲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 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乙구청장이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ㄷ. 乙구청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5. <보기>에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기존 약국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한다.
- ㄴ.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ㄷ.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ㄹ.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ㅁ.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이 고시된 경우,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6.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 ②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되어야 한다.
- ③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④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7. 행정의 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서 직접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직규범은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②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서훈취소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 ③ 법문언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어 해당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행정청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8.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 ③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민원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면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9. <보기>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ㄱ.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 ㄷ.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순히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 수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 ㄹ.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한 법규명령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ㅁ.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① \neg , \exists
② \neg , \forall
③ \neg , \neg , \neg
④ \neg , \neg , \exists
⑤ \neg , \neg , \forall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법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은 무효이다.
- ②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그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행정청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적용되는 형량하자의 법리는 사인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11. 관할 A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위법함을 이유로 甲에 대해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철거명령의 기초가 된 건축물의 위법성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甲은 더 이상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A행정청은 甲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 ③ A행정청이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甲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④ 甲에 대한 철거명령이 적법하더라도 그에 따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A행정청에 있다.
- ⑤ 甲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해 A행정청이 하는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12.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② 과실행위를 행정형벌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을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던 중 금지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 ④ 양벌규정이 있더라도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만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 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1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의해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의미하고,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 매립지와 인접해 있어 그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포함된다.
- ⑤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1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문서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⑤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다.

15. <보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보 기>

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ㄴ.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6.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장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②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공법인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가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그 전보인사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이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없다.
-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같은 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농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⑤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할 수도 있다.

1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그 계약의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 ③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이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도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농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 <보기>에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제3자는 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ㄴ. 처분 업무를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 ㄷ. 처분의 재심사 신청 내용에는 처분의 일부 취소와 일부 변경도 포함된다.
- ㄹ. 행정청의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의 조사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절차의 하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할 뿐, 무효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으로서는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 ⑤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사업자가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1. <보기>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 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횡령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ㄷ.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톱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관리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된다.
- ②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수익적 처분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3. <보기>에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 ㄴ.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 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ㄹ.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 ㅁ.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 ㅂ.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허가

- ① 0개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24. 영업양도 등에 따른 영업자 지위 또는 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불법차량증차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책임범위는 지위 승계 전후로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전부에까지 미친다.
-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
- ④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5. <보기>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ㄴ. 행정기본법령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며,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ㄹ.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 ① ㄴ,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